

기고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혁신은 데이터 혁신에서 시작된다

'도량형 통일'. 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도량형 통일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꽤 자주, 중요한 대목마다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수탈하는 손쉬운 방법은 도량형을 속이는 것이었다고 한다. 관리들이 세금을 걷을 때 부피나 무게, 길이 등을 속여 징수하면 재물을 쉽게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나라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11년 대용량 데이터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해 탈세 및 사기 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납

세자의 과거 행동 정보를 분석하여 사기성 행동을 검출한 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범죄자와 관련된 계좌, 주소, 전화번호, 납세자간 연관성 등을 분석해 고의 세금 체납자 등을 찾아냈다. 그 결과, 연간 3450억 달러(약 388조원) 가량의 세금 누락과 불필요한 세금 환급을 줄였다고 한다.

오늘날, 과거의 도량형 통일을 대신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추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적된 행정 정보의 활용은 비단 조세정의 실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행정자료를 결합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 과연 목표했던 효과를 발휘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멈춰버린 경제활동에 의해 우려되는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알아본다고 가정하자.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국세청 및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개개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현금 및 신용 카드 이용 정보 등을 결합하면, 여태까지의 어떤 연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다.

지난 주,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ers Network Korea: ADRNK)'가 발족하였다. 행정데이터는 빅데이터(Big Data)이다.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의 생성 속도(Velocity), 데이터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뜻하는 3V를 특징으로 한다.

행정데이터는 전체 인구 개개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수십 년 동안 집적된 것을 결합한 것으로, 국가 수준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빅데이터이다.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의 창립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설계·집행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이다. 북유럽은 이미 1960년대부터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미국은 2016년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CEP)를 설립하여 행정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증거 생성 및 활용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중북규제 완화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개통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행정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처별로 편제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결합하고 다양한 변수를 확보하는 등 전 국민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 정책 과정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데이터 구축만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를 필두로, 통계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측 실무진과 각계각층의 연구자들이 합심하여, 정확하

고 신속하게 구축된 행정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복잡다단한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가려졌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혀야 한다.

내가 속한 국가 공동체는 나에게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지, 내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혹시나 정책과정에서의 오류로 정부의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격차가 심해지고 있지 않은지, 방만한 재정 투입으로 나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알 권리에 기반한 정책이라야, 맹인모상(盲人摸象)에 의한 정책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 행정데이터 연구자 네트워크 발족 취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정책혁신은 데이터 혁신에서 시작된다. 증거기반 사회정책과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행정데이터의 구축이 없이는, 정부 정책혁신은 기대하기 힘들다".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정책혁신의 초석인 데이터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AX : (062) 222-5547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lderly care, emergency, and public information.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dvertising, and circulation departments.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 위한 방법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두번째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고,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비염이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

게는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심장과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두통은 물론 집중력 저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천식은 물론 폐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법은 마스크 착용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생활이 되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환자들은 외출 시 비염치료를 수시로 뿌려주고 알레르기약을 평소에도 섭취한다면 외출 전에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미세먼지 성분의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을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

외출 후에는 샤워 및 양치를 해주고 특히 기관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법은 3분 동안 짧게 환기를 하거나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한다.

윤화영/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